

“美·EU 따라 슈퍼부양책 쓰면 더 큰 위험 온다”

코로나 재확산에 골목상권 지원… 3차 지원금 4兆이상
새해부터 추경 가능성… 재정적자, 선진국보다 낮지만
재정수지·나랏빚 악화속도 빨라… 건전성 관리해야”

‘돈 더 풀어도 될까?’ 중국발 코로나 19(우한 폐렴) 3차 유행의 확산세가 무섭다. 정부가 새해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주기식 재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제전문가들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만 맹목적인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일부 선진국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재정지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9665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닷새 연속 1000명선을 넘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3단계 범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들어왔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만간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발길이 끊긴 골목상권은 울상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로 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당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자며 입대로 직접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목적예비비가 지원금 규모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건은 재정건전성이다. 지난 8일 재정당국이 펴낸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 10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가량 적자 폭이 커졌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씹씹이는 해피진 탓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하다. 90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5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적자의 2배에 달한다.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드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10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812조9000억원이다. 한달새 12조6000억원, 1년 전보다

11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한국이 외국보다 재정여력이 있고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므로 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발표한 ‘2020~2022년 세계경제전망’에서 앞으로의 재정 정책방향은 취약한 부문에 집중하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보면 올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월 IMF는 세계 각국 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등으로 말미암은 올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부양책 규모가 GDP의 3.5%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에비해 뉴질랜드(19.5%), 싱가포르(16.1%) 등 주요 선진국의 평균 재정부양책 규모는 GDP의 9.3%쯤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경제전문가들도 미중유의 감염병 확산사태를 맞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나랏빚 증가 속도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나랏빚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불어난다. 올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정수지도 빠르게 악화중이다. 지난 6월 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86% 흑자로 나타났다. 구조적 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이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인 세입·세출 변화를 뺀 지표다. 불경기에는 세수가 줄고 지출은 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빼고 큰 틀에서 나라살림이 어떨지를 보는 것이다. 미국(-6.54%), 일본(-3.44%), 영국(-2.54%)은 적자로 추정됐다. 독일(0.36%), 호주(1.3%), 그리스(3.77%)는 흑자를 보였다. 한국은 2018년 3.37%, 지난해 2.14%, 올해 0.86%로 흑자폭이 뚜렷한 감소세다. 악화 속

도는 우려스럽다. 올해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OECD 회원국중 그리스(2.21%p) 다음으로 빠르게 나빠졌다. 그리스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가 -17.47%를 기록할 정도로 나랏돈을 흥청망청 썼고 결국 이듬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그동안 재정적자를 비교적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악화된 외국사례와 비교할때 최근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른 나라보다 (재정부양책 규모)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전에 집계한 자료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사실상 ‘로다운(봉쇄) 국면’에 접어들면 재정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건정성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지금처럼 지출하면 재정건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도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다. 유럽, 미국처럼 전면적인 록다운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재정 투입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당할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며 “(봉쇄령이 내려졌던) 유럽 등에서 재정 지출이 많으니 우리도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기준이 모호하다. (재정을) 더 푼다고 경제가 꼭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내수진작용 소비촉진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돈을 얼마나 더 풀어서 수요를 진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을 풀거나 소비를 진작하는 전제조건은 (감염병) 팬데믹(범유행)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가 되살아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백신 접종 등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반면) 우리는 백신으로 내년 3분기 이전에 팬데믹을 잡을 준비가 안돼서 소비진작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전세 대출 폭증… 가구당 빚 8256만원

금융부채 6050만원
자영업자 1억 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8,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30대·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17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10만원에 비해 4.4% 늘어난 수치다. 부채는 금융부채(6,050만원)와 임대보증금(2,207만원)으로 구분된다. 전년 대비 각각 5.1%, 2.4%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카드 관련 대출(71만원)이 22.7% 급증했다. 신용대출(868만원)도 10%나 늘었다. 가장 큰 규모인 담보대출(4,743만원)은 3.5% 증가했다.

통계청은 부채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부채 발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보증금 위해 부채를 얻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를 살펴보면 40대가 1억1,327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50대 9,915만원, 39세 이하 9,117만원, 60세 이상 5,279만원 등 분포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세 이하가 12.2%로 가장 높았다. 30대의 부채 증가율은 50대(6.4%), 40대(6.0%)의 2배 수준이었다.

소득분위별 평균 부채를 보면 최상위층인 5분위가 1억8,645만원, 4분위 9,975만원, 3분위 6,851만원, 2분위 4,056만원, 1분위 1,752만원이었다. 부채 증가율로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8.8%)와 2분위(8.6%)가 5분위(5.3%), 4분위(1.4%), 3분위(3.0%)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구주별로 따지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1,7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용근로자는 이보다 낮은 1억6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3,516만원이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가 체감하는 상황 부담도 커졌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67.6%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지난해 응답률보다 1.1%p 증가한 수치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6.7%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원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반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5,828만원)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계의 소비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06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세금이 전년 대비 0.7% 늘어난 357만원,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료는 4.3% 증가한 353만원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5%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부채 증가율(4.4%)이 자산 증가율(3.1%)을 웃돌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공공기관 내년 3200명 신규채용

한전 등 18조 투자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들이 내년 18조억원 가량을 자체 투자하고 32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롯데호텔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도에는 시설 및 설비 등에 18조5000억원이상을 자체투자하고 지역상품구입,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 63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비대면 화상면접 등을 활용해 한전 1100명, 한국수력원자력 380명, 한전KPS 230명 등 3204명을 신규채용키로 했다.

성 장관은 “최근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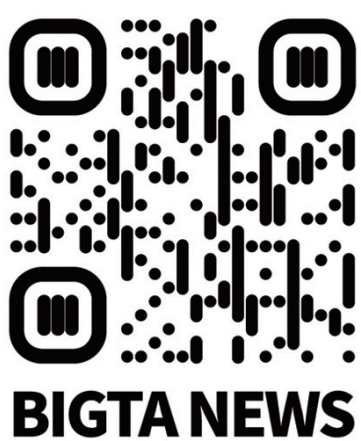
정된 자체투자와 신규채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은 수요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이 공급될 수 있게 내년 상반기까지 약 5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하고 정부R&D과제에 수요공공기관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규R&D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빅데이터로 보는
진짜 뉴스
진짜 민심
빅터뉴스

데이터 저널리즘의 새 지평



빅터뉴스 · 워드미터
bigtanews.co.kr